



#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채원영 연구원

- 일본 정부가 발표한 소비세율 인상과 경기부양책으로 아베노믹스가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의도한 기업투자 증가와 일본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sup>1)</sup> 10%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으로 법인세 감면과 인프라 투자 등이 포함된 총 5조 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엔화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외환정책을 발표하였음.
  - 소비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는 사회보장비 재원과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사용될 계획임.
  - 소비세율 인상으로 예상되는 내수둔화<sup>2)</sup>를 충당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인상 유도를 위한 감세와 공공투자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 엔화 약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외환정책을 발표하였음.

〈표 1〉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본의 경기부양책

구분	내용	규모	시행시기
감세정책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7,300억 엔	2014년 1월 이후
	임금인상 촉진을 위한 세제 확충	1,600억 엔	올해부터
	주택대출 촉진을 위한 감세	1,100억 엔	2014년부터
	특별법인세 폐지	9,000억 엔	폐지여부 올 연말에 결정
경제정책	저임금노동자에게 현금 지원	3,000억 엔	올해 추경예산에서 처리
	주택구입자에게 현금 지원	3,000억 엔	
	공공사업 등 재정 투입	약 2조 엔	
	지진회복사업	1조 3,000억 엔	
외환정책	소액투자비과세 (ISA: Investment Saving Account)	-	2013년 10월 1일부터

자료: 일본 내각부, 니혼게이자이 신문.

1) 2015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8%에서 10%로의 인상은 경제상황을 점검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함.  
 2) 아베 내각은 원안대로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2014년 GDP 성장률이 1.0%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바 있음.

■ 금번 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발표된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1997년 소비세 인상의 경우와 달리 수요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난 1997년 4월 일본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소비세율 3%에서 5%로 인상)으로 1997년 2/4분기 민간소비 3.5%, 경제성장률 0.9% 전분기대비 각각 감소하였고 1997년 4/4분기 이후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바 있음.
  - WSJ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으로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 일본 내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고 보도함.
- 그러나 1997년의 경우와 달리 금번 소비세 인상은 대응책으로 발표된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충분히 크고, 양적·질적 통화 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소비세 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며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감세 및 경제정책으로 흡수된다면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도 올해 -7.0%에서 2015년 -3.3%로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
  - IMF는 2015년까지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238%에서 2020년 254%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 감세·경제정책이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임금인상과 투자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 소비세율 인상 직전 발표된 기업경기체감지수(단간지수)는 6월의 +4에서 9월 +12로 크게 개선되어 2007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현재 38%인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활동에 긍정적일 수 있음.
- 반면, 올해 기업의 투자지출 계획조사 결과 기업 투자지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들은 엔화가치가 2014년에는 소폭 절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아베노믹스가 의도하는 임금인상과 투자증가가 현실화될 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는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로 일본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산업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1997년 4월 소비세 인상 당시에 소비세 인상 직전까지 증세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위한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전분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이 1996년 3/4분기 0.3%, 4/4분기 1.1%, 1997년 1/4분기 2.1%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199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4% 증가하였음.

-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가 예상대로 소비세 인상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 및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얻었고, BOJ의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 지속과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가치가 하락할 전망이다.
- 또한 아베노믹스는 성공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를 이끌 새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실패로 인해 리만 브라더스 당시와 같은 크기의 충격을 세계경제에 줄 수도 있어 우리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Wall Street Journal, Reuters, 니혼게이지신문 등)